

# 기업 氣 살리기를 위한 2004년 산업정책 방향

양 병 내\*

## 1. 국내외 경제 전망

금년도 세계경제는 미국의 회복주도하에 성장세는 확대될 전망으로, 이에따라 교역량도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4%내외, 일본과 유로경제는 1% 후반, 중국은 7~8%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외국인투자는 '00년을 기점으로 선진국 경기 위축, 국경간 M&A 감소 등으로 감소 추세이나, 중국, 카자흐스탄, 체코, 러시아, 인도 등 고속 성장국가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며,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중이다. 중국의 경우, '02년도 개도국 외국인투자유입의 32.5%를 차지하였다. 또한 한·일간 및 중국·ASEAN FTA 추진 등 무관세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글로벌 大경쟁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경제는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은 수출 증가세 지속과 설비투자 회복, 내수의 완만한 회복으로 연간 5%대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반기로 가며 회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對中 수출의 지

속성장, 설비투자를 중심으로한 내수회복 등을 감안할 때 90억불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은 2,110~2,130억불(9.3~10.4%), 수입은 2,020~2,040억불(13.5~15.2%)정도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는 세계경기의 회복전망과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금년보다 약 20% 정도 증가된 80억불 내외(신고기준)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경제에는 여러 경제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거시적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층간 소비 등에서 미시적인 경기 양극화 현상이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등 구조적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미시적 조정(Surgical Strike)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 호조세 지속이 투자, 고용, 소비 증가 등으로善순환되는 연결고리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공장의 해외 이전, 일부 대기업 주도의 성장 등으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jobless recovery)'이 우려되고 있다. 설비투자의 회복은 민간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수출증가 지속만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분규 심화, 핵심·덩어리 규제의 잔존 등으로 설비투자추계(통계청)가 '03년 1/4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사무관

기에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 11월에는 8.1% 감소 등 국내투자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한국 산업발전의 밑거름이었던 역동성(Dynamism)의 상실이 우려된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300만명, 가계 부채는 GDP의 74%수준인 440조원에 달하는 점 등은 기업과 국민들로 하여금 투자와 소비에 있어 판단을 유보하게 하는 요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금년 우리경제는 대외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6%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의 극복여부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

## 2. 2004년도 산업정책의 목표와 전략

상기와 같은 금년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2004년도 산업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에 미래산업과 경제에 대한 비전을 보여 주고, 위축된 “기업의 氣 살리는” 일이다. 이를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물경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반기업정서 해소, 노사·입지·인력 등 기업경영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중소·벤처기업의 활력 회복, 수출의 지속적 확대 등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특히 이와 같은 기업의 기를 살리는 일에 산자부, 재경부 등 모든 정부기관이 범부처적으로 종합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

또한 당면한 경기대응과 함께 작년에 마

련한 참여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을 실천에 옮겨 우리경제와 산업의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 시장개혁 등은 작년에 로드맵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우리 산업은 고령화시대의 돌입과 자본생산성 저하, 기업의 수익성 중시경향 등으로 '80, '90년대 노동과 자본의 투입증대를 통해 성장을 이끈 투입주도형(investment-driven) 전략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해말 대외경제연구원에서 한국의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시기를 2008년과 2016년의 중간정도로 예측한 바 있으나(가령 2001-2012년 전후), 이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는 5~6%이상의 고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인력, 노사, 기업제도 등 국가시스템에서 혁신과 지식창출에 기반을 두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혁신주도형(innovation-driven) 성장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투입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용기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제품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win-win 전략이다. 산업자원부에서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외국인투자유치의 지속적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의 창출과 부품소재산업의 진흥,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을 추진

한다.

### 3. 2004년 산업정책의 핵심과제

#### 가. 기업투자 활성화

금년에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 투자애로의 실질적 해결,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등 기업의 氣를 살리는 정책대응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타파하기 위하여 기업신문고 등의 설치를 통하여 기업애로를 종합적으로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산자부 소관규제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집행단계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요인을 철저히 제거한다.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정책의 합리적 개선과 창업·퇴출, M&A, 분사 등 활성화로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도 추진한다.

사회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 각 주체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공통교재 개발·보급하고, 윤리경영지표(KoBEX: Korean Business Ethics Index) 보완·발전 등 투명·윤리경영의 도입을 확산할 계획이다.

노사관계에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시장의 공정한 규범으로 재편 추진하고, 생산성증가율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는 임금제모델 개발·보급하여 합리적인 임금협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업투자애로 해결 정책협의회”를 지속적

으로 운영하여 기업 경영현장의 구체적인 애로를 적극 발굴·해결한다. 회의는 월 1~2회 개최하되 부총리와 산자부장관이 교대로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5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 나.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활성화 5개년 계획』의 시행, 『창업지원법』 개정 등을 통해 창업 소요 기간 및 비용의 획기적 감소를 추진하고, 경영·회계·법률 등 성장단계별 효율적 지원을 통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겠다.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실시하고,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열, 냄새, 분진 등) 해소장비개발·보급을 확대하여 작업환경의 개선을 지원한다. 교대제 확산을 위해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56→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중소기업 협력지원센터」 설치('04: 20억원), 대·중소기업간 납품관행의 자율개선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자금·인력·마케팅 등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ABS 발행을 통한 장기자금조달 지원('04: 4,000억원) 등 자금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제조업 공동화에 조기 대응

제조업의 성장엔진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 산업구조고도화의 적극

추진 등을 통해 공동화에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입지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과,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복무를 포함한 병역의무인력의 합리적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기업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도입으로 생산성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산업의 환경경쟁력도 제고 하겠다.

한편 e-Biz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여 전자문서 사용을 촉진하고,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시스템(G4B, 04~07: 890억원) 구축으로 기업민원처리 및 정보제공방식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겠다. 효율적 유통·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출점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국가물류종합정보망 구축(03~07, 총650억원)과 RFID(무선주파수 인식기술)시범사업 및 응용기술개발 추진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유통·물류시스템 구축에 앞장 서겠다. 디자인 혁신기반 조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 기초기반기술 등에 대한 R&D지원과 디자인클러스터조성사업(RDC, DIC)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라.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추진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자정보 소재(디

스플레이, 2차전지, 반도체재료 등) 및 관련 장비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원천소재 - 핵심부품 - 기반장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업종별 18개 신뢰성 평가센터에 핵심 부품·소재 신뢰성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뢰성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Japan Desk」를 설치하여 일본 첨단 부품·소재 기업의 Green Field형 투자를 유치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박사급 인력을 지방중소 부품·소재 기업의 현장에 파견하여 애로 기술해결 지원('04년, 200억원)하여 지방 부품·소재기업의 기술혁신도 강화하겠다. 또한 IT 투자확대를 통한 장비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산화 필요품목 도출 등을 통하여 수요-공급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

마. 기술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금년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으로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국가 기술혁신체제의 성과중심 개편, 기업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 표준, 디자인 등 기술혁신기반의 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5개 주관산업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의 세부계획을 종합 조정한 후 산업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중심으로 지원하며, 국제기술협력 로드맵도 작성한다.

성과중심의 국가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R&D 과제의 기획, 평가에 있어 산업계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신기술실용화사업은 기업(현재는 대학, 연구소)이 기술개발 과제를 지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 「기술이전촉진법」을 사업화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지역 기술이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신규 금융지원 제도 도입도 추진하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한다.

산·학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기업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중심대학」의 지정·육성을 추진하여 대학의 교육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지역의 산학협력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계운영사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창의적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인력수급 통계조사」 및 「국가기술인력지도」 작성, 공학 교육 인증사업, 산학협동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현장지향형 석·박사 기술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또한 Capstone-Design 추진 대학을 확대하고, 학기중 산업체 현장근무를 하고 2~18학점까지 인정받는 현장실습학점인정 대상을 확대한다.

전략적 표준화 및 품질혁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5개년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가표준정보센터 구축 등 전략적 표준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분야별(제조, 서비스, 공공 등) 한국형 품질경영지수(QMI) 개발, 국가품질상 선정 기준에 시범도입(04년) 등을 통하여 품질경영 혁신기반도 구축하겠다.

#### 4. 결어 : 산자부부터 변한다, 기업도 할 것은 하자

금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2만 불시대 달성을 위한 혁신주도형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뛰어야 한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총괄부처인 산자부와 그 유관기관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대민서비스, 대기업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산자부 및 유관기관이 기업애로의 실질적 해결창구가 되어야 하며, 거창한 구호보다 기업애로를 실질적으로 한건 해결하는 것이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산자부와 그 유관기관이 “기업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부도 스스로 변하여 기업을 위한 “서비스형 정부象”을 정립하고 기업-정부간 혁신을 지향하는 파트너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드러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와 정경유착에서 보듯이 그간의 기업차원의 투명경영과 지배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독립적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등 우수한 기업지배구조 마련과 정경유착 근절 등을 통하여 투명경영·책임경영을 실천하여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기업들의 부패가 기업 전반에 대한 반기업정서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기업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